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 홍우택 · 김석진 · 고재홍 · 이승열

NORTH KOREA STRATEGY
PEAC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홍우택·김석진·고재홍·이승열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인 책 2014년 1월
발 행 2014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718-5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
I. 분석 배경	1
II. 분야별 논조 분석	7
1. 정치	9
2. 경제정책	21
3. 대남정책	36
4. 핵정책	67
III. 요약 및 정세 평가에서 고려 사항	81
1. 분야별 특징	83
2. 정세평가에서 고려 사항	86
참고문헌	89
최근 발간자료 안내	91

요약



- 2013년은 김정은 정권 2년 차로서 각 분야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2월 3차 핵실험, 3~4월 대남 군사긴장고조, 4~9월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대남·대외 공세를 취함.
- 2012년과 비교한 2013년의 북한 정책 논조는
 - 2012년과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 전반적으로 내용이 2012년 계승성을 강조했다면, 2013년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약간의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김정은식 공고화의 양상을 보여줌.

〈정치분야〉

- 김정은 집권 2년차의 특색을 드러냄.
 - 집권 1년차와 대체로 지속성을 보이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짐.
-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의 주요 내용
 - 만경대와 백두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정통성 강조
 - 선대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제정
 -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수립

-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제시
 -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사상 강조
 - 장기적 국가전략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제시
 - 강성대국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식령 속도 창조
- 장성택의 처형과 유일영도체계 확립
 - 종파 행위 척결을 통한 유일영도체계의 담보 마련
 - 조선인민군 내 유일영도체계 확립 및 공고화

〈경제분야〉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제기
 -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설정
 -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방위력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더 큰 힘을 돌린다고 주장
- 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 등 여러 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
 - 3월에 전국 경공업 대회를 열고 경공업 육성을 특히 강조
 - 경공업 원료, 자재 문제 해결 및 설비 현대화 필요성 강조
-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완성’을 강조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확고히 고수,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 대외 무역,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발전 천명

〈대남정책〉

- 4월 말까지는 거부적이고 대결적인 대남 논조 유지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및 그 지속 가능성 비난
 - 박근혜정부 주요 인사의 대북 인식과 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비난
 - 3차 핵실험 이후 핵무력과 핵전쟁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한미연합 군사 훈련 및 한미동맹 강화 비난
 - 인권, 탈북자, 납북자 관련 왜곡 및 비난
 - 개성공단 관련 책임 전가
- 5월 이후 대남 유화 공세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사이 문제 논의 요구
 -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과시
- 9월 초 이후 다방면에 걸쳐 대남 비방 및 선전전을 재개
 - 박근혜정부의 대북인식, 인권·탈북 문제, 한미군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비난
 - 한국 내정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비난

〈핵정책〉

- 핵실험과 핵무장은 자주권 행사라고 강조
 - 미국의 위협을 핵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장
 -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위협으로 간주
- 선제공격을 자신들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
 - 선제공격이 자신의 군사작전의 하나임을 강조
 - 조선인민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물리적 행동 감행 가능성 적시
 - 핵무기 공격대상은 미국 및 남한의 군사기지
- 핵기술과 핵무력의 지속적 발전 추구
 -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핵포기는 거부
 -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조건은 미군 철수
-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변

I. 분석 배경



- 2013년은 김정은 정권 2년 차로서 각 분야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2월 3차 핵실험, 3~4월 대남 군사긴장고조, 4~9월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대남·대외 공세를 취함.
- 2012년과 비교한 2013년의 북한 정책 논조는
 - 2012년과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 전반적으로 내용이 2012년 계승성을 강조했다면, 2013년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약간의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김정은식 공고화의 양상을 보여줌.
- 김정은 정권 2년간 권력 개편
 - 2012~2013년 9월까지 당·정·군 주요 인사의 218명 중 거의 절반(44%)이 교체됨.¹
 - 당에서 부장급 이상 40%, 정에서 상급 이상 47%가 교체되었으며 군에서는 4대 핵심 지위(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가 전원 교체됨.
- 통치 이데올로기의 강조점 변화
 - 2012년 김정은 정권은 ‘수령영생사업’, ‘유훈통치’, ‘김정은의 영도 보장 및 결사옹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정치 계승’,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을 강조
 - 2013년에는 ‘혁명가계업적’, ‘강성대국’, ‘김일성-김정일주의’, ‘김

¹ 통일부,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2013년 10월 8일; “北 김정은 집권 후 당·정·군 주요인사 44% 교체,” 『연합뉴스』, 2013년 10월 8일.

정일 애국주의’, ‘마식령속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 ‘선군혁명’, ‘당적 지도’, ‘우리민족끼리’ 등을 강조

- 경제정책에서 강조점 변화
 - 2012년에는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 지식경제강국 건설, 국토 관리사업, 내각은 경제사령부, 사회주의 원칙 고수 등을 강조
 - 2013년에는 ‘경제건설과 핵건설의 병진’, ‘마식령 속도’, ‘경공업의 생산 정상화’, 지방공업 육성,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완성, 대외무역의 다각화, 관광 및 경제개발구 개발 등을 강조

- 대남정책
 - 2012년은 김정일 사망관련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 김정일·김정은을 중상 모독한 것에 대한 적개심 고취, 한국의 총선(4.11)과 연말 대선에 대한 개입 발언, 통일부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상투적 비난, 핵 위기 고조 및 전쟁발발 가능성 경고 등을 주요 주제로 하였음.
 - 2013년은 이명박정부와 대북정책 비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대남 핵 위협 및 도발 위협, 인권 탈북 납북자 문제 왜곡 비난, 한국 사회 혼란 조장 선동, 개선공단 파행 비난 및 책임 전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 * 2013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4월까지 강경 입장, 5~9월 유화 입장, 10월 이후 강경입장 복귀의 변화를 보였음.

- 핵정책
 - 2012년 북한은 김정일의 업적인 핵보유국 지위 강화, 핵 억지력

- 이 한반도 평화 보장, 핵무기보다 강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 장비 보유 등을 강조
- 2013년에는 자위권 행사로서의 핵실험과 핵무장, 핵기술과 핵무력의 지속적 발전, 경제 지원을 대가로 한 핵포기 거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협상의 조건은 미군 철수,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 등을 강조
- 2013년은 12월 장성택 숙청으로 마감했음.
 - 장성택은 12월 8일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찍혔고,
 - 12월 12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은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사형을 선고하였음.
-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북한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다음의 주요 북한 원문자료를 분석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를 연구
 - 정치
 - 경제정책
 - 대남정책
 - 핵정책

Ⅱ. 분야별 논조 분석



1. 정치

가. 주요 논조와 정책 방향

-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정통성 강화·발전
- 김정은 시대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
- 김정은식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선군혁명노선 제시
- 장성택 전 당 행정부장 숙청을 통한 유일영도체계 확립 및 공고화

(1)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정통성 강화·발전

- 만경대와 백두의 혁명 전통을 물려받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정통성 강조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주체혁명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가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을 공세적으로 과감히 벌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²(12.17)
- 선대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 강조, 빈번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² “김정일 사망 2주기 중앙 추모대회,”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17일.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³(2.16)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⁴(3.31)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4월 15일 0시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⁵(4.15)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3. “김정은, 2.16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6일.

4. “김정은, 黨중앙위 정치국·중앙군사위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5. “김정은, 4.15 0시 ‘태양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5일.

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⁶(10.10)

- 금수산태양궁전법 제정을 통한 수령영생위업 후계자로서의 역할 강조
 -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사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할 데 대하여서와 금수산태양궁전 영구보존 위원회를 조직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생의 사진문헌들과 련차, 승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 훈장들을 영구보존할데 대하여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였다.”⁷(4.1)

(2) 김정은 시대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

- 김정은 시대 권력 정통성의 핵심이며, 지배이데올로기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
 -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멸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⁸(1.1)
 - “오늘 우리 앞에는 영생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만고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줄기차게 이어가야 할 책임적이고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 있습니다.”

6. “김정은,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0일.

7.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과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에 대한 보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8. “김정은, 1.1 2013년 새해 신년사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일.

다.”⁹(1.28)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혁명무력강화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¹⁰(10.25)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¹¹(12.9)

-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유산에 대한 강조

-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관·혁명관·인민관은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하다”고 칭송하며 “인민의 행복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새 전성기와 펼쳐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 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정치에 빛나는 결실”¹²(12.2)

- 사회주의 정책노선으로 김정일 애국주의 제시

-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녀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사회주의 조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열의

9.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개회사,”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8일.

10. “김정은 지도下 軍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11.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9일.

1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로동신문』, 2013년 12월 2일.

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¹³(1.1)

-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도록 하는데 당정치조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다.”¹⁴(2.12)

(3) 김정은식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선군혁명노선 제시

- 사회주의 건설의 대원칙으로써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사상 강조
 -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정치방식이며 선군사상의 원리들과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적인 정치방식”이라고 강조¹⁵(8.25)
 -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 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¹⁶(8.25)
- 선군절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13. “김정은, 1.1 2013년 새해 신년사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일.

14.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15. “김정은, 8.25 “선군절” 즈음 담화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5일.

16. 위의 글.

같이 결정하였다. 1.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선군절인 8월 25일 국가적 명절로 한다. 2. 해마다 8월 25일을 국가적 휴식일로 한다. 3. 조선인민군 부대, 구분대들에서는 이날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를 띄울 것이다. 4.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가정들에서는 이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울 것이다.”¹⁷(8.28)

- 장기적 북한의 국가전략인 경제와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로선이며, 우리의 핵무력은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다.”¹⁸(3.31)
 - “당의 병진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다.”¹⁹(3.31)
 -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공포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

17. “北, 선군절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8일.

18. “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19. 위의 글.

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²⁰(4.1)

-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²¹(3.31)

-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식령속도 창조**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일 조선의 전체군대와 인민들에게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시였다.”²²(6.5)
-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밝히시였다.”²³(6.5)
-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100여차에 걸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사거리,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 등을 현지도하시였고, 2013년은 김정은 시대에

20.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과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에 대한 보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21. “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22. “김정은, 6.4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호소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23. 위의 글.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²⁴
(12.12)

(4) 장성택 전 당 행정부장 처형을 통한 유일영도체계 확립

- 장성택 전 당 행정부장의 처형
 - “12월 8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과 그 일당에 대한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한 문제 토의를 열고 ‘장성택의 모든 직무해임과 일체 칭호박탈, 출당 및 제명시킬 데 대한 결정서 채택’”²⁵(12.9)
 - “장성택일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행위를 저지름.”²⁶(12.9)
 -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장성택은 형법 제 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특별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음.”²⁷(12.13)
- 종파행위 척결을 통한 당 내 유일영도체계 확립 및 공고화
 -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유일영도체계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 전민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노선에 대한 절대성·무조건성의

24. “김정은시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12일.

25.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9일.

26. 위의 글.

27. “北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13일.

- 정신을 지니고 영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²⁸(12.10)
- “혁명위업 계승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인 지금이야말로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숙청하고 우리 당 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던 그 기풍, 1970년대에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지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던 그 정신이 그대로 맥박쳐야 할 때이다.”²⁹(12.10)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더욱 더 강도높이 맹렬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³⁰(12.10)
 - 강계시 당위원회 비서, 부장은 “들도 없는 만고역적으로 역사에 두고두고 계산해야 할 저주로운 놈이며 우리는 김정은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며 유일적영도체계를 표명. 남포시 당위원회 부장, 부부장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역적·혁명의 배신자” 등으로 비난, “김정은 유일 중심·김정은 결사옹위투사가 될 것을 결의 다짐”³¹(12.15)
- 조선인민군 내 유일영도체계 확립 및 공고화³²(12.16)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최고

28.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가자,” 『로동신문』, 2013년 12월 10일.

29. 위의 글.

30. 위의 글.

31.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15일.

32. “조선인민군 장병들 맹세모임 진행,”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16일.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단결과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것을 다짐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맹세모임이 16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

-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태양의 빛발이 온누리를 비치는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엄숙히 맹세합니다.”
-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만을 위해 숨쉬고 피가 뛰며 김정은 동지만을 위하여 싸우는 백전불굴의 혁명전사들이다.”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의미 분석

- 김정은은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으로 인한 정당성(합리, 전통, 카리스마) 부재를 김일성-김정일 혁명 가계의 업적과 혁명유산을 강조 함으로써 유일영도체계의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함.
- 사상과 정책노선에 대한 공표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
 -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북한 식 사회주의 정책노선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제시
 - 통치이데올로기 심화·발전과 선대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
 -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은 체제를 위해 당과 인민들에게 요구되

는 충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식 사회주의 강성국가와 선군혁명노선 제시
 - 준비된 지도자의 이미지를 형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이것은 독재관리시스템의 강화로 나타날 것임.
-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 공고화를 위해 김정은은 위신 과시용 및 정치적 소비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장성택에 가려 보이지 않던 통치자에게 보이는 영웅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상
- 새로운 권력 체계 안정화의 필요성 인식
 -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장성택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의 권력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
 - 장성택 실각으로 표면화된 지도부 내부 갈등과 불안정 잠재성을 수습하고 새로운 권력 체계를 구성하여 정치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할 것임.
 - 당분간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충성 과시 광풍이 불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제도화되어 있는 ‘수령’의 지위와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영속화하는 행마를 둘 것임.
 - 공안·사법 분야를 총괄했던 행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조직지도부를 강화시켜 친위조직으로 키우고자 할 것이며, 총정 치국과 당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부의 발호를 억제하고자 할 것임.

(2) 특이사항

-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 및 참배하는 횟수가 많음. 특히 김정일도 방문한 적 없었던 당중앙위원회 회의 이전과 당창건기념일에도 방문함으로써 금수산기념궁전을 매개로 유일영도체계의 정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충성맹세 결의대회는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는 것에 반해, 조선인민군 충성맹세 결의대회 또한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진행함으로써 혁명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김일성·김정일 수준의 충성도를 요구하고 있음.
-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김정일 생전까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김정일 사후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국관·혁명관·인민관 즉, 인물의 사고 자체가 과학적이며 완벽하다고 주장함.
 -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고를 ‘혁명적인 과학’으로 포장함으로써 인민들의 행복을 담보해 주는 기제로 격상시킴.
 -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과 정치노선을 합법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장성택의 공개된 죄상은 실각의 실제 결정적 이유가 아닐 것임.
 - 북한 당국이 공개한 장성택에 대한 죄상은 거의 모든 북한 고위 지도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며(특히 비리 문제), 이전 시기의 행태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장성택과 추종세력의 숙청은 공포와 복지부동으로 인해 경륜이 없는 김정은에게 전략적으로 조언할 세력의 부재를 의미
 - 정치공안 중심의 정책사고로 인한 정책 능력의 마비현상 가능성
 - 김정은의 변덕, 과잉, 모험주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장성택 실각 이후 권력 체계에서는 김정은, 당 조직지도부 그리고 군부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정책

가.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 산업정책과 예산지출 방향
- 경공업의 정상화와 현대화
- 경제관리 개선
- 대외무역과 경제특구 및 개발구

(1)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제기함.³³(4.2)

³³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당 중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 “당의 병진로선은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로선”

(2) 산업정책과 예산지출 방향

- 북한 당국의 산업정책 방향은 김정은의 2013년 신년사와 4월 1일 최영림 총리의 내각 사업 보고에 제시되어 있음.
-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 목표를 강조하면서 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두루 언급함.³⁴
(1.1)
 -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특히 석탄, 금속공업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

³⁴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 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입니다.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 최영림 총리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행한 내각사업 보고에서 여러 산업부문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함.³⁵(4.2)
 - “올해 내각은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추켜세워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지며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총집중하여 인민생활 문제를 푸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조직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할 것이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이미 꾸려놓은 주체철 생산기지들을 완비하고 제철, 제강소들의 기술개선,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원료, 연료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압연강재 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3.5배 이상 장성시켜 강재수요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철도운수 부문에서 철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면서 수송의 긴장성을 풀도록 할 것이다.”
 - “올해 알곡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전국이 달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1(2012)년 사업정형과 주체102(2013)년 과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라붙어 세포등판 개간과³⁶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풀판 조성을 끝내도록 할 것이다.”

- “중요 화학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단천지구 광산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수출을 늘여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 “살림집 건설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휴양지, 관광지로 꾸리며 도, 시, 군들에서 인민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면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갈 것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술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선, 현대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 2013년 국가예산계획에 의하면, 주요 산업부문의 예산지출 증가율은 대체로 비슷함.³⁷(4.2)
 -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9%로 늘어게 된다.”
 - “그 가운데서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부문은 107.2%, 농업과 경공업 부문은 105.1%, 기본건설, 대보수를 비롯한 기본투자는 105.8%, 과학기술 부문은 106.7%, 교육부문은 106.8%, 보건부

36. ‘등판’은 “산등성이의 평평하게 넓은 곳”이라는 뜻의 북한 말이며 세포등판 개간 사업은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에 걸쳐 있는 등판에 대규모의 밭, 축사, 축산 가공공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가리킨다.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문은 105.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부문은 103.7%, 체육부문은 106.1%, 문화부문은 102.2%로 늘이도록 하였다.”

- 한편, 김정은은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 건설과 문화후생시설 건설을 독려하면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되는 ‘마식령 속도’의 건설 방식을 모든 건설 현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함.
 -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 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⁸(1.1)
 - “나는…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떨쳐온 군인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호소문을 보낸다.”³⁹(6.5)

(3) 경공업의 정상화와 현대화

- 전반적 산업정책 방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김정은이 3월에 전국 경공업대회를 열어 경공업 육성을 특별히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함.

38.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39.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2013년 6월 5일.

- 김정은은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 연설에서 경공업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함.⁴⁰(3.9)
 - “현시기 경공업 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경공업을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입니다.”
 -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다량생산하며 특히 기초식품과 1차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 김정은은 경공업 원료, 자재 문제 해결과 설비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료, 자재 및 설비의 국산화를 주문함.⁴¹(3.9)
 - “경공업 원료, 자재 문제를 해결하자면 당면하여 인민생활자금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공업의 위력도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천지구 광산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똑 떼여 전적으로 인민생활자금을 보장하는데 복무하도록 해주시었으며 이 지구 광산, 기업소들을 개건하고 단천항까지 건설하도록 하시었습니다.”
 - “경공업 원료, 자재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방도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경공업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⁴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3월 9일.

⁴¹ 위의 글.

실현하는데서 화학공업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질 좋은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 나라 경공업의 현대화 수준은 아직 뒤떨어져 있습니다. 경
공업부문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 경공업을 새로운 과
학기술적 토대 위에서 활력 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
니다.”
- “공장들을 현대화한다고 하여 남의 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외화
를 들여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려고만 하는 편향을
없애야 합니다.”
- 또한 김정은은 지방공업 육성과 ‘상업, 급양, 편의 봉사망’의 현대화
필요성도 강조함.⁴²(3.9)
 -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형편에서 지방산업 공장들을 잘 돌려
도 인민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상업, 급양, 편의 봉사망들을 현대적으
로 꾸리고 그 운영방법을 혁신하며 상품 확보와 원자재 보장 대
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공장들과 상업 봉사기관들에서
는 생산된 제품이 비법적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없애고 인민들에
게 더 많은 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42- 위의 글.

(4) 경제관리 개선

- 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함.⁴³(4.2)
 -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기업관리방법으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에 대하여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⁴⁴(5.15)
 -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번 것만큼, 일한 것만큼 분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일부 단위들에 도입하고 있다.”
 - “공업현장에서 독자적인 판매권, 무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상정되었다.”
 -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

43.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44.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 완성을,” 『조선신보』, 2013년 5월 15일.

- 평양의 3.26 전선공장에 대한 보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됨.⁴⁵(4.24)
 - “이 조치 ‘새로운 사회주의 기업관리방법’은 작년에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평양에서는 5개 단위들에 도입되었다. 평양 3.26 전선공장은 그 중의 하나이다.”
 - “공장들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여러 대상들과 자체의 결심으로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 “그 전에는 수익의 사용용도가 항목마다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조치에 의해 리득의 일부를 규정에 맞게 국가에 납부하면 나머지는 자체의 결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작년 8월부터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현재는 작년의 20~30배 수준이다. 국가에서 규정된 생활비(월급)만이 차레지던 종전과 달리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 “국가계획을 벗어난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에 등록하며 그에 따르는 로력계획도 국가의 지도를 받는다. 설비갱신 등으로 잉여 인원이 나올 경우는 로력삭감을 제기할 수 있다.”
- 조선신보는 협동농장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함.⁴⁶ (4.29)
 - “작년 각지의 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에 기초하여 로동과 실적에 맞게 정확히 현물 분배가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45.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년 4월 24일.

46. “분조관리의 생활력 보여주는 삼지강 협동농장,” 『조선신보』, 2013년 4월 19일.

- “농장들은 국가적인 생산계획을 달성하여 나라에서 부여받은 토지, 보장받은 관개, 영농물자, 비료 등의 대금에 상응하는 몫만 바치면 그 외 남은 농작물들을 모두 농장의 결심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새로운 조치에 의해 농장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도, 농장에서 요구되는 시설, 설비도 자체의 결심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 “국가에서 요구하는 생산계획을 충족시키면 다른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

(5) 대외무역과 경제특구 및 개발구

-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와 관광 및 경제개발구 개발 과제를 지시함.^{47(4.2)}
 -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 건설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까.”
 -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 최영림 총리의 내각사업 보고에서도 수출산업 육성, 대외무역 다각화, 경제개발구 창설 사업 계획을 밝힘.^{48(4.2)}

4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1(2012)년 사업정형과 주체102(2013)년 과업에 대하여.”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대외시장에서 당당한 경쟁력을 가진 2차, 3차 가공품, 완제품을 생산하는 수출기지를 전망성 있게 꾸리고 최신 과학기술성 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수출품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 “여러 가지 무역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 것과 함께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실현하고 합영,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 북한 당국은 2013년 5월 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⁴⁹(6.5)
 -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국가는 투자자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

⁴⁹ “조선에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 건설 부문과 첨단과학 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 2013년 11월에는 1개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었음.⁵⁰ (11.21)
 - “조선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하였다.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 “조선에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정령에 의하면…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를 내온다. 도들에 내오는 경제개발구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⁵⁰.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결정.”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21일; “조선에서 도들에 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결정.” 『조선중앙통신』, 2013년 11월 21일.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경제정책 기조

- 북한 당국이 제시한 경제정책 기조는 상호 모순된 방향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강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우선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 당국은 동시에 석탄, 전력, 금속, 화학, 철도 등 전통적인 중화학 부문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음.
 - 국가예산지출에서도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율보다 중화학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율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음.
 - 경공업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자립경제 노선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북한식의 비효율적 화학, 기계공업을 다시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석탄, 전력, 금속, 철도 부문에서도 북한식의 비효율적이고 낙후한 기술에 의존하는 자립경제 노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핵 병진노선도 전통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지만, 약간의 새로운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에서는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경제 건설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방비 부담이 컸던 전통

- 적 경제·국방 병진노선보다 진전된 노선임을 암시함.
- 또한 ‘핵동력 공업’을 통해 전력문제를 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경제·핵 병진노선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시사함.
 - 실제로 북한은 영변에 소규모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더욱 큰 규모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 개혁·개방 시도에 대한 평가

- 북한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경제관리방법’ 개선 조치는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의 경험을 모방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조관리제 중심의 농업개혁은 집단농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농제도로 전환한 중국보다 훨씬 소극적임.
 - 국영기업 개혁은 중국의 초기 ‘방권양리(放權讓利)’ 개혁과 비슷하지만, 이미 널리 퍼져 있는 비공식적 관행의 추인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도 초기 국영기업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음.
 -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도 중국의 경험을 모방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 개방여건이 미비하고 개발정책도 훨씬 소극적이며 북한 내부기업 및 내부경제와의 연계가 부족함.
-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비공식경제, 그 중 특히 사경제·사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음.

- 당국의 정책과 별도로, 북한에서는 이미 개혁적인 성격을 갖는 자생적 변화, 즉 비공식경제의 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공식경제의 확산, 그 중 특히 사경제·사기업의 발전은 2000년대 초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세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추측됨.
 - 당국이 추진하는 ‘경제관리방법’ 개선 조치는 제한적인 체제내 개혁에 불과하지만 사경제·사기업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북한 당국이 경제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정책을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성장과 체제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여러 해 동안 대대적인 투자와 건설 붐이 일어났음.
 - 김정은은 이른바 ‘마식령 속도’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더욱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리한 건설 정책은 경제적 자원 낭비로 인한 피해를 낳을 수 있음.

3. 대남정책

가. 주요논조와 정책방향

- 대선관련 대북정책 기조 연계 차단
- 이명박정부와 대북정책 비난
- 박근혜정부 압박 및 상투적 비난
- 대남 핵위협 및 도발 위협
- 인권·탈북자·납북자 문제 왜곡·비난
- 남한사회 혼란 및 갈등 조장
- 개성공단 관련 비난 및 책임전가
- 대남 유화 공세
- 대남 대화 회피 및 비난선전전 재개

(1) 대선관련 대북정책 기조 연계 차단

- 북한은 2012년 말 남한 대선을 겨냥,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의 연계를 차단하는데 주력
 - 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되돌려 세울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어 저들의 대결정책을 다음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보려는 고약한 위험한 심보의 발로이다”라고 비난⁵¹(1.5)
 -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의 대북정책 차기정부 연장 발언을 “동족대결망발”이라고 비난⁵²(1.11)

51. “북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역적무리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5일.

52. “극악한 역적, 통일휘방꾼의 악담,” 『평양방송』, 2013년 1월 11일.

- “5.24와 대북제재에 대해 떠든 것은 다음기 정권에서도 저들의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⁵³(1.11)

(2) 이명박정부와 대북정책 비난

-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북 발언, 대북정책, 유엔제재 동참,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대북전단 살포, 한미동맹강화, 북한인권법 발의 등을 대결정책으로 호도
 - 북한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무법의 <불법한계선> 고수를 코에 걸고 벌리는 사소한 령해침범 행위도, <애기봉 등탑점등> 행사와 빠라살포와 같은 모든 대북심리전 행위도 그것은 례외없이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며 북남합의와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로골적인 전쟁도발 행위”라고 호도⁵⁴(1.2)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으로 호도하고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위협하면서 한미군사훈련, 대북 빠라살포 행위에 대해 경고⁵⁵(1.3)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대북발언에 대해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광란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53. 위의 글.

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일.

55. “조평통대변인 성명,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못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 통일념원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라고 비방⁵⁶(1.5)
-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의 북한 ‘급변사태’ 관련 발언에 대해 “북의 내부상황, 변화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었다”, “천영우가 떠들어댄 격변사태 수작은 이명박 역도가 지난 5년간 줄곧 망상해 온 급변사태의 동의어이다”라고 비난⁵⁷ (1.11)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및 남한의 대응조치와 관련, 조평통 서기국 보도(1019호)를 통해 “그어떤 형태의 제재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위협⁵⁸(2.2)
 - 북 외무성은 정전협정 60돌을 맞아 비망록을 발표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
 -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⁵⁹(1.14)
 -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노력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북인권법>이라는 것은 반공화국뼈라 살포와 극우보수단체 지원 등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하나의 대결악법이다”라며 새누리당을 비난⁶⁰(1.14)

56. “북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역적무리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

57. “극악한 역적, 통일휘방꾼의 악담,” 『평양방송』, 2013년 1월 11일.

58.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9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일.

59. “북 외무성 비망록,”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60. “동족대결의 악몽을 되살리려는 행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빌미로 3차핵실험 가능성을 예시하고 남한정부의 반응을 비난
 -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이며 “북남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론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 전면무효화를 선포한다.”⁶¹(1.25)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한계를 넘어서고 핵위협이 가증되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요구이다.”⁶²(2.7)
 - 3차핵실험 이후 남측 정부가 “우리에게 대한 <체제변화>설을 또 다시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대결병자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고 비난⁶³(2.16)

(3) 박근혜정부 압박 및 상투적 비난

- 북한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대북 인식과 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비난하고 남한사회내 최고존엄 모독 분위기 차단에 주력

6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5일.

62.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7일.

63.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대결병자의 히스테리적 망발,”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6일.

- 박근혜정부 및 주요 인사의 대북인식·발언 비난
 -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국방부 장관내정자 김병관이 “북의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깨끗이 벌초해 버려야 할 깡패 무리”라고 비방⁶⁴(3.12)
 - 3월 13일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에서는 박근혜 신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군사위협 중지 요구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자제하는 가운데 청와대를 겨냥⁶⁵(3.13)
 - 비핵화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면대결전을 <도발>로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핵무장까지 해체시키려고 헤뎀비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못할 천하역적질”로 비난
 - 청와대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방에서는 무슨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청을 둔구면서 <무기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느니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자멸할 것>이라느니 하는 지극이 상서롭지 못한 악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난
 - 3월 26일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에서 “천벌을 맞을 괴뢰군부깡패들의 극악한 대결망동은 청와대 안방에서 풍겨내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비난함.⁶⁶(3.26)

64. “깨끗이 벌초해버려야 할 깡패무리,” 『로동신문』, 2013년 3월 12일.

65. “북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3일.

6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 3월 27일 조평통 대변인은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도발 희생자 추모사를 비난함.⁶⁷(3.27)
 - 또한 “현 <정권>이 리명박 <정권>과 다를 바없는 대결<정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청와대 안방주인은 이에 대해 똑바로 알고 발언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이미 <대통령취임사>와 <3.1절 기념사>라는 데서도 독기서린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도수를 넘어섰다”고 위협
-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대북 도발시 강력한 응징 발언과 관련해 “한시바빠 때려잡아야할 전쟁미치광이”라고 비난하고 “진짜 전쟁맛, 불맛을 보게될 것이다”라고 위협⁶⁸(4.20)
- 5월 25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실명을 들어 비난⁶⁹(5.25)
 -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의 이러한 망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의 현 괴뢰집권자들의 차후 움직임은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

67. “北 「조평통」 대변인, 3.27 南 대통령 발언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68. “한시바빠 때려잡아야 할 전쟁미치광이,”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진짜 전쟁맛, 불맛을 보게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0일.

69. “남조선의 현 괴뢰집권자들의 차우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5일.

-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비난
 -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탐색기를 거쳐 5월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비방을 본격화
 - 박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희생자 추모사(3.27)에 대해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신뢰프로세스>니, <대화>니 하는 것은 한갓 위선과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⁷⁰(3.27)
 - 5월 10일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대해 조평통 대변인은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북핵을 용납할 수없고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남조선당국자 자신이 공언하였는데 이것은 리명박 역도의 <비핵개방3000>을 포장만 바꾸어 다시 내건 대결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발언⁷¹(5.10)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실현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화는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철두철미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⁷²(6.4)

- ‘최고존엄’ 모독 분위기 차단에 주력
 - 북한은 한국의 김부자 동상·기념비 공격, 체제 비난 및 정권붕괴 발언, 인권 문제제기, 군사훈련 실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 등을 최고 존엄 모독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

70. “조평통 대변인, 3.27 남 대통령 발언비난.”

71. “조평통 대변인, 박 대통령의 대북발언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72. “민족을 우롱하고 세계를 기만하는 ‘국제화’ 소동,”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4일.

- 남측 국방부 장관의 ‘김부자 동상 미사일 타격계획’ 발언과 관련해 비난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자들은 더는 살아숨쉬지 못하게 될것이다”라고 경고⁷³(3.26)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최후통첩장을 통해 남측의 ‘초상화 화형식’ 등 최고존엄 무시 행위에 대해 보복을 위협하는 등 북한 자극 분위기 차단에 주력⁷⁴(4.16)
 - 남측에서 “반공화국집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우리 최고 존엄의 상징인 초상화들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최고사령부의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보복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지만
 -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크고작은 모든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보복행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보임.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고존엄 모독은 반민족적 인 특대형 범죄행위”로 비난하면서⁷⁵(4.20)
 -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을 일삼으며 미제와 야합하여 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괴로보수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고 6.15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 오기 위한 최후의 결전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대남 선전전 전개

73. “조평통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74.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6일.

75.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0일.

- 북한은 7.27 휴전 협정일 전후 조선일보의 북한 돈벌이 행태 기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를 “극우보수대변지, 반공화국모략지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최고존엄을 모독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을 할 것이며 반공화국모략군들은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⁷⁶(7.19)

(4) 대남 핵위협 및 도발 위협

-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무력과 핵전쟁 가능성 위협을 강조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동맹 강화 등을 비난
 - 한미군사훈련 비난과 핵전쟁 위협
 - 노동신문 논평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을 “북침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 “우리의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 등으로 왜곡⁷⁷(3.13)
 - 3월 27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은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군통신선을 단절한다는 ‘전통문’을 발송하였고, 5월 7일

⁷⁶ “북 조평통 대변인, 7.19 조선일보 비난 중통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9일.

⁷⁷ “도전을 짓밟개기 위한 단호한 선택,” 『로동신문』, 2013년 3월 13일.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서남해상수역에서 강행되고 있는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측 령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 등을 지시⁷⁸(5.7)

- 3월 13일 북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은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허리띠를 조이며 “다중화된 정밀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이라고 강조⁷⁹(3.13)
 - “이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 시효도, 북남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은 것은 우리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행동뿐이다”라고 위협
- 노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핵전쟁을 위협, “일단 조선전쟁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국부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화할 것이다”라고 주장⁸⁰(3.18)
- 4월 18일 조평통 담화에서는 “이번에 우리는 미국과 사실상 한차례의 핵전쟁을 치른 것이나 같다. 미국은 최신핵전략무기들과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위협하였다. 마땅히 우리는 강위력한 핵타격수단으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였다”라고 공언⁸¹(4.18)
- 조평통 서기국 보도에서는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여하는 미항공모함 니미즈호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78.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7일.

79. “북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3일.

80. “북남불가침 합의를 뒤집어 얹은 장본인,” 『로동신문』, 2013년 3월 18일.

81. “조평통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8일.

위험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라고 경고⁸²(5.11)

■ 한미동맹 비난

- 3월 18일 조평통 대변인은 한미 간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비난⁸³(3.18)
 - “<공동국지도발 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문서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침략전쟁포고이다”라고 비난 “우리의 강력한 핵타격 앞에 무용지물로 될 미국의 핵 우산이 결코 괴뢰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비난
- 5월 2일 조평통서기국 보도에서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난⁸⁴(5.2)
 - “미제침략군은 그 돈을 미군기지들을 확대강화하고 북침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데 써먹을 뿐아니라 그 무슨 박물관과 식당건설, 지어 미군전용호텔지원과 인건비로까지 람용,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 5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극구 찬양하면서 미국과의 반공화국결탁을 더욱 강화하려는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등 “동족대결 흥심을 드러낸 매국행각”이라고 비난⁸⁵(5.11)

82. “북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37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1일.

83.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84.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 1034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85. “동족대결 흥심을 드러낸 매국행각,”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1일.

■ 대북전단 살포 비난

- 4월 26일 국방위 정책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제의를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⁸⁶(4.26)
 - “우리를 악랄하게 비방증상하는 뼈라 살포행위를 꺼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순하고 도전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비난
 - “반공화국뼈라살포행위가 철두철미 괴뢰당국의 직접적인 비호와 조장밑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하게될 것”이라고 경고
- 6월 남측의 ‘북한자유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뼈라살포지점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물리적 공격가능성을 위협⁸⁷(6.29)
 - “림진각에서 벌리려는 이번 뼈라살포행위는 이러한 도발의 연장선에서 감행되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이다.”
- 10월 9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심각히 반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⁸⁸(10.9)
 - “인간추물들을 전연일대에 내몰아 하루가 멀다하게 반공화국뼈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행위를 벌리는 것이 과연 상대방에

86. “북국방위정책국 대변인 담화-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하게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6일.

87.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9일.

88. “북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10.8 중통기자 질문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대한 존중이고 우리의 체제를 비난하며 쫓겨대는 망발들이 품격을 갖춘 언행인가”라고 비난

(5) 인권·탈북자·납북자 문제 왜곡·비난

-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과 관련, 조평통 서기국은 ‘백서’를 통해 남한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하는 왜곡·선전을 강화
 -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만행에 항변 한마디 못하는 괴뢰들이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것이 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비난⁸⁹(3.18)
 -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인권유린왕초인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일 한조각의 체면도 없다”고 주장, 상기의 것들을 거론하며 대북인권제기에 맞붙⁹⁰(3.18)
 - 특히 인권법 제정과 관련 “남조선 《국무총리》가 《북인권법》 제정에 대해 떠벌인 것은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북과 남의 신뢰와 단합, 자주통일이 아니라 《체제통일》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⁹¹(8.24)
-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 북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측이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려다 발각되었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사건”으로 왜곡선전⁹²(6.5)

89. “북 조평통 서기국 백서, 남조선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90. 위의 글.

91.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광대극,”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4일.

92. “북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 “괴뢰패당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유괴랍치 책동과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즉시 걷어 치우며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남한사회 내 탈북자 활동에 대해 북한 인민보안부는 특별담화를 발표⁹³(6.19)
 - “괴뢰당국자들이 대화의 막뒤에서 악질탈북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추물들을 <북한문제전문가>들로 둔갑시켜 우리에게 대한 공개적인 비난전에 앞장 내세우고 있다고” 대북 비난 활동에 대해 경고
 - 인민보안부는 “현 괴뢰당국자들과 날강도 미국의 부추김밑에 대역죄를 덧쌓고 있는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 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위협
- 전시납북자 문제와 관련, 조국전선 대변인은 중통기자 대답을 통해 “<전시납북자>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친미사대적이며 반인민적인 리승만괴뢰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의 품으로 자진여거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⁹⁴(6.28)
 - 남측의 목적은 “<전시납북자>문제를 또하나의 <북인권문제>로 부각”시켜 “북남관계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문제들과 함께 <전시납북자>문제를 상정시켜 복잡성을 조성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한다고 비난

93. “북 인민보안부 특별담화- 추악한 인간쓰레기들까지 굶어모아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광신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9일.

94. “조국전선 대변인 중통기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8일.

(6) 남한사회 혼란 및 갈등 조장

- 북한은 남한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국정원 해체주장,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새누리당 반대,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비난, 통합진보당 비호 등 대남 선전·선동전을 강화
 - 남한사회에서 “괴뢰정보원의 정치개입행위가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왜곡
 - “남조선 인민들은 파썬통치의 도구이고 동족대결의 아성인 괴뢰정보원을 쓸어버리고 남조선사회의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할 것이다.”⁹⁵(3.24)
 -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통해 “조국강토를 황폐화 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남측 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반대하여 총궐기해야 나서야 할 것”⁹⁶(3.28)
 - 새누리당의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라고 비난하면서 “통일애국운동을 거세 말살하려는 <새누리당>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책동을 단호히 분쇄 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⁹⁷(5.9)
 - 남측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 터지면서 현 <정권>의 존립기반이 밀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그것을 눌러버리기 위해 로무현 전 <대통령> 발언내용을 다시

95. “조평통 서기국 보도 1025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4일.

96.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8일.

97.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36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9일.

금 문제시하던 끝에 수뇌상봉 회담화락을 전격공개”했다고 왜곡 선전⁹⁸(6.27)

- 남한의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보려”는 “모략소동”으로 규정⁹⁹(9.6)
- “괴뢰보수패당은 독재통치와 동족대결,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운을 거세하고 련북통일 분위기가 높아가는 것을 막으며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21세기 마녀사냥극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¹⁰⁰(9.6)

(7) 개성공단 관련 비난 및 책임 전가

- 3월 30일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폐쇄 가능성을 위협,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대변인은 한국정부의 대북태도와 남한 언론의 태도여하에 있다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 남측 기업가들의 행동을 주문¹⁰¹(3.30)
 - “개성공업지구 남측기업가들은 조성된 사태를 똑바로가려보고 괴뢰패당과 그 어용언로들의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망발에 응당 반격을 가해 나서야 할 것이다.”
- 4월 11일 중앙특구개발총국 대변인은 중통기자 대답형식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와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하여 존폐여부를 검토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선포”하고 개성공단 폐쇄 책임을

98. “조평통 대변인 긴급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7일.

99.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0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6일.

100. 위의 글.

101. “북 중앙특구개발총국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한국정부에 전가¹⁰²(4.11)

- “현집권자는 리명박 역도의 집권시기에도 살아남은 개성공업지구
구를 오늘에 와서 폐쇄직전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다”고 주장¹⁰³(4.11)
- 노동신문도 ‘개성공업지구 폐쇄위기는 누가 몰아왔는가’라는 논
평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곳을 동족대
결책동의 마지막 과녁으로 삼고 전쟁도발의 발원지로 전락시키
고 있는 남조선괴뢰역적패당에게 있다”고 책임 전가¹⁰⁴(4.11)
-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정상화 관련 대
화제의에 대해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거부¹⁰⁵(4.14)
 - 이후 ‘6.15실천위원회’, ‘노동신문 논평’, ‘국방위 정책국’ 등이 동
원되어 남측의 대화 제의 거부의 정당성과 책임전가에 대한 선
전전에 주력
- 5월 15일까지 개성공단문제와 관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은 남측의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¹⁰⁶(5.15)
 - “개성공업지구가 오늘의 파국적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
로 현 괴뢰보수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소동과 괴뢰군부깡패

102.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중통 기자 대담,”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1일.

103. 위의 글.

104. “개성공업지구 폐쇄위기는 누가 몰아왔는가,” 『로동신문』, 2013년 4월 11일.

105.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4일.

106.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개성공업지구 사태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담,”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 들의 북침전쟁책동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 “국제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무슨 안전장치요 뭐요하는 것은 또다른 인질과 억류사태를 넘두에 둔 대결 망발이 아닐 수 없다.”

(8) 대남 유화 공세

- 북한은 5월 말 개성공단문제 등과 관련한 기존의 대남 대결적·거부적 논조와 태도를 대남 대화 제의 등 유화적 입장으로 전환
- 5월 들어 중앙특구지도총국 대변인은 “남조선민심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제품의 반출이 아니라 바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이다”라고 정상화 가능성을 제기¹⁰⁷(5.20)
- 5월 28일 조평통 대변인은 재차 “우리는 대화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문제 해결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며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업가들의 방문길도 열어 주어야한다”고 변화된 입장을 표명¹⁰⁸(5.28)
- 6월 조평통 대변인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
 - “지금까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업지구정상화, 인도주의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고 자찬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¹⁰⁷-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5.20 중통 기자 대담,”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0일.

¹⁰⁸- “북 조평통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8일.

- 럼 남남갈등을 조성하려 한적도 없고 남측당국을 헛바지로 본적도 없으며 엇먹어라는 식으로 대한 적도 없다”고 주장¹⁰⁹(6.6)
-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절절한 청원을 고려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남북당국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¹¹⁰(6.6)
 - 6월 10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발표문을 채택,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 긴급한 문제 협의하기”로 결정¹¹¹(6.10)
 - 노동신문의 ‘대화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 논평에서도 입장 변화를 제시¹¹²(6.12)
 - “북남관계문제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쌍방이 다같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지향될 수 있다.”
 - 8월 7일 조평통은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 일방적 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주도권 장악에 주력
 - 한국기업들의 출입을 전면허용하고 북측근로자드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109-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6일.

110- 위의 글.

111-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발표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0일.

112- “대화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2일.

- “이 건설적인 제안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화답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¹¹³(8.7)
-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서도 “북남관계 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벌리는 것이다”라고 표명¹¹⁴(8.12)
 - 개성공단 제7차남북당국실무회담(8.14)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나아가 8.18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도 제의
- 8월 29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담화를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강조¹¹⁵(8.29)
 - “냉전시대의 유물인 적대관념과 동족대결 정책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이다.”
 - 9월 3일 김정은이 1년 남짓 기간에 세 차례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방어대’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남 도발 위협이나 언행은 감지되지 않음.¹¹⁶(9.3)

113.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7일.

114. “북남관계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 『로동신문』, 2013년 8월 12일.

115. “국방위 정책국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9일.

116. “김정은 장대도 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3일.

(9) 대남 대화 회피 및 비난 선전전 재개

- 대남 대화 회피 등 강경 입장으로 전환
- 북한은 9월 6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 1040호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의 대남 대화 입장을 버리고 다방면에 걸쳐 대남 비방 및 선전전을 재개하기 시작¹¹⁷
 - 한국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의 체포구금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보려고 발악하는 모략 소동”으로 규정하고 “북남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라고 위협(9.6)
- 이후 국방부 장관의 대북 발언 비난, 조평통 대변인 성명, 노동신문 논평, 중앙통신 논평, 재입국탈북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 대화를 회피하고 대남 비난 공세로 전환
 - 9월 18일 조평통 서기국은 보도를 통해 국방부 김관진 장관이 “북남관계발전에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호전적 망발을 계속 늘어놓으며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난¹¹⁸(9.18)
 - 이어 조평통은 ‘성명’을 발표,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군사훈련, 통진당사건 등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때 까지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¹¹⁹(9.21)

11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40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6일.

11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401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18일.

119.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1일.

- 9월 23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남한의 보수세력들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엄청난 대결망동으로 민족 화해의 길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방¹²⁰(9.23)
- 9월 29일, 조평통대변인의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을 통해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 9월 30일 재입국탈북자들의 좌담회를 진행, “우리주민들을 유인 랍치하여 남조선에 끌여가기 위한 괴뢰패당의 모략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남한정부를 비난¹²¹(9.30)

■ 대남 비난선전전의 강화

- 북한은 10월 들어 박근혜정부의 대북인식, 인권·탈북문제, 한미군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 등에 대한 비방·비난 선전전을 본격화
- 10월 5일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박근혜 패당은 우리의 응당한 비판과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북남선언을 백지화하고 체제대결을 공식 선언한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공연히 내들고 나선 것이 바로 박근혜일당이다.”¹²²(10.5)

¹²⁰- “우리의 최고존엄 위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23일.

¹²¹- “재입국 탈북자 박진근·장광철 좌담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사랑의 정치가 제일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30일.

¹²²-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5일.

-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패당은 민족공동사업인 금강산관광재개사업도 누구의 <돈줄>을 막는다고 하면서 차단하고 모처럼 마련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인듯 철면피하게 놀아대면 대결목적에 악용함으로써 무산”시켰다고 비난¹²³(10.5)
- 10월 8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 보수언론들의 ‘국가원수지칭’ 요구 비난하며
-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1차적인 경고이다.”¹²⁴(10.9)
- 10월 14일 조평통 담화를 통해 “박근혜가 동남아시아를 행각하여 우리를 못되게 헐뜯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허황된 비난>이라고 한 통일부를 “최고존엄을 또다시 중상모독했다”고 왜곡 비난¹²⁵(10.14)
- 인권·탈북 문제 비난
 - 북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10.3) 한국의 북인권기록보존소 단체의 <2013 북인권백서>를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또 하나의 용납못할 반민족적 망동이다”라고 비하¹²⁶(10.3)

123. 위의 글.

124.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10.8. 중토기자 질문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125. “북 조평통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4일; “대결격화를 노린 또 하나의 도발행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4일.

- 한국을 “인권의 폐해지대,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인권유린의 왕초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가소로운 추태”라고 비난¹²⁷(10.3)
- 10월 20일에는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랍치행위로 남조선에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과의 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설득적 방식에 의한 탈북차단에 주력¹²⁸(10.20)
- 한미군사훈련 비난 및 전쟁위협
 - 10월 5일 노동신문은 미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동해상 한미 연합 해상훈련 참가를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규탄하고¹²⁹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간 <맞춤형억제전략>에 의한 해상합동군사훈련과 핵항공모함 참가를 비난¹³⁰(10.9)
 - 10월 21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 1047호를 통해 국방부의 대북 군사대비태세와 신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대북 발언, 대북심리전 등을 비난¹³¹
 - “괴로군부 호전과들의 악랄한 군사적 도발소동을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에 대한 극악한 도전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겨레의 지향과 내외여론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범죄적 책동으로 락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단죄한다.”¹³²(10.21)

¹²⁶- “북 인권연구협회의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일.

¹²⁷- 위의 글.

¹²⁸- “남조선괴뢰들에게 유인랍치되었던 청소년들과의 죄담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0일.

¹²⁹-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5일.

¹³⁰- “북 외무성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¹³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47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1일.

¹³²- 위의 글.

- “대북심리전은 국제법상 전쟁행위와 같은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위협¹³³(10.21)
- 남한사회 혼란과 갈등 조장
 - 조평통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북남관계파탄과 대내적 위기로하여 안팎으로 수세에 몰린 처지에서 벗어나 국면을 전환 시키고 당면한 보충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며 나아가 통일애국인사들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을 제압, 교살하고 남조선을 저들판으로 만들어 보려는데 그 흉악한 기도가 있다”고 왜곡선전¹³⁴(10.10)
 - 10월 24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 1048호에서는¹³⁵ 통합진보당 사건을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의 근간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련북통일, 민주개혁세력을 위축시켜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비호, 대남 선전전으로 활용
 -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통해 대선개입사건, 이석기내란 음모사건 등을 왜곡 선전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악의 소굴이고 민주와 통일의 암인 괴뢰정보원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¹³⁶(10.25)

133. 위의 글.

134.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0일.

135.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 1048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4일.

136. “북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 대북정책 비난 재개¹³⁷(10.24)
 - 10월 24일 장문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외세와 결탁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것으로서 리명박○○가 추구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비난하고
 - “북남관계개선을 전면부정하고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정책”이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억지 주장
 - 남북 간 예정되어 있는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와 국제화 문제, 북한이 일방 연기한 이산가족상봉 개최를 위한 남북 대화를 회피하고 그 책임을 전가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의미 분석

- 대남 관련 북한 보도매체의 전반적 논조는
 - 전통적으로 상투적인 남측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대북 인식과 발언 및 대북정책을 대한 비방과 비난, 위협으로 일관함으로써 과거의 대남관련 보도매체의 논조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북한의 대남관련 보도매체는 대남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갓 출범한 박근혜정부 비난 및 핵전쟁 위협 등을 통해

¹³⁷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4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¹³⁸(3.28)

- “일단 조선전쟁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국부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화할 것이다.”
- “지금과 같이 교전쌍방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에 의해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핵전쟁으로 될 것이며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 및 대북정책 비난과 관련, 시기와 사안별로 북한의 상투적인 비난 이외에 일종의 탐색기를 거친 것으로 파악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미군사훈련 실시와 박근혜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북 인식과 강경 발언 등에 비난은 상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과 대북정책 비난을 자제하는 가운데 5월 중순이후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대통령의 실명을 들어 비난
- ‘최고존엄 모독’ 문제는 모든 대남 기구들이 총동원되어 ‘보복공격 위협’ 등 민감하게 대응하지만 기실은 남한사회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
 - 북한은 한국의 김부자 동상·기념비 공격, 체제 비난 및 정권붕괴 발언, 인권 문제제기, 군사훈련 실시, 자유민주주의 통일 등을 최고존엄 모독으로 인식하고 대응

138. “범민련 남북, 해외본부 공동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8일.

- ‘최고존엄’ 모독에 대해 최고사령부의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모든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실천 행동은 회피
- 7월 19일 최고존엄 모독과 관련한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 수위는 과거의 물리적 보복공격 위협 등과 비교해 매우 약화
-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을 할 것이며 반공화국모략군들은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¹³⁹ (7.19)
- 탈북자 문제와 관련, 탈북 감소를 위한 설득적 방식의 활용 증대
 -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재입국 탈북자 기자회견, 탈북 청소년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남한 정부 및 사회생활 비판을 전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기존의 탈북 차단의 주요 방식인 강제적 차단 방식과 함께 설득적 방식을 비중있게 활용함으로써 향후 탈북자 감소를 위해 ‘설득적 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특히 10월 25일 북한은 불법입국한 남한주민 6명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냄으로써,¹⁴⁰ 향후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을 요청할 것으로 분석

¹³⁹- “북 조평통대변인 7.19 조선일보 비난 중통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7월 19일.

¹⁴⁰- “북적, 10.25 남한 주민 6명 송환,”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논조 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핵전쟁 위협 선전이 지속
-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 보복 대상과 방법이 보다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시기에 따라 조절되는 양상
 - 남북 당국 간 대립이 팽팽했던 6월의 경우 군사적 보복 위협 등 비난 수위가 높은 반면 8월 남북대화 시기에는 비난 수위가 약화, 10월에 다시 비난 수위가 고조는 양상
- 한미동맹과 관련, 주한미군 철수 혹은 전작권 문제에 대한 비난이 현저히 감소하고 미군범죄·분담금 사용 등 주한미군의 사회적 폐해를 중심으로 비난을 강화¹⁴¹(3.18)

(2) 특이사항

-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의 결정 요인으로서 대남 요인의 불투명
 - 북한은 5월 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대남 대결적·거부적 태도와 논조를 대남 대화노력 등 유화적 입장으로 전환
 - 반대로 9월 6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 1040호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의 대남 유화적 태도를 버리고 비난 선전전을 재개
 - 10월 초 이후에는 남북대화를 회피하고 강도 높은 비난 선전전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을 유도
 - 지난 5월 북한의 대남유화적 태도 전환이나 10월 대남 대결입장

¹⁴¹ “북 조평통 서기국 백서- 남조선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 전환 모두 북한의 대남 관련 정책 논조 자체에서는 뚜렷한 변화 동기를 발견하는데 어려움
- 따라서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는 대남 요인에서라기보다 5월의 최룡해의 방중의 결과라는 대외적 요인과 9~10월의 장성택 실각이라는 대내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대남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의 변화
 - 과거 물리력 위주의 대남 군사공작에서 선전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공작으로 대남정책의 방식이 이동할 가능성
 - 북한은 6월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과 7월 1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대남 정치공작 위주의 선전전으로 전환
 - 6월 12일 노동신문에서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북남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라고 밝힘.¹⁴²(6.12)
 - 9월 3일 김정은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방어대 시찰 시에도 뚜렷한 물리력 사용위협이나 언행이 보이지 않았으며 9월 6일 대남 비난선전전 재개 이후 군사공작을 위주로 하는 ‘물리력 사용’ 위협은 전반적으로 감소된 특징
 - 이러한 정치공작 위주의 대남정책이 계속될 경우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남북 대화와 협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증대

¹⁴² “대화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현실적 문제,” 『로동신문』, 2013년 6월 12일.

다. 대남정책 전망

- 대남정책 수행에 있어 대남 비난의 수위와 강도가 시기와 사안에 따라 변할 수 있음에도
 -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공작 방식이 중심이 될 경우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대화와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 증대
 - 다만 내년 초 한미 전작권 연기 문제나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 실시 등 시기적으로 상투적인 대남 비난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대남 도발 위협 등이 대남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남북대화 지속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이산가족 상봉의 재추진 등 사안에 따라서 대남 요인 보다는 대내 혹은 대외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추진될 가능성
 - 지난 해 남측의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비난이외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감소, 북한 지도부내 전쟁 비경험 세대의 증가 역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를 유인
-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 내년 전작권 전환, 대북전단 살포행위, 최고 존엄 모독, 군사훈련 등과 관련해 도발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대부분 ‘위협’에 치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와 달리 대남 도발은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나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져와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탈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 등 설득적 방식의 탈북 감소 조치가 지속될 것이며 불법 입북한 남한주민 6명의 송환 조치로 중국 내 탈북자 복송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
- 북한은 2013년 말 노동신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나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구체적으로 ‘국제화’를 겨냥
 - 남북 간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4. 핵정책

가.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 핵실험과 핵무장은 자위권 행사
- 선제공격을 자신들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
- 핵기술과 핵무력의 지속적 발전 추구
- 정전협정 백지화
- 경제적 대가에 상응한 조치로 핵포기는 거부
-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조건은 미군철수
- 자신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함을 강조

(1) 핵실험과 핵무장은 자위권 행사

- 핵실험·핵무장을 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 수단임을 강조

- 핵실험·핵무장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 조치의 일환”¹⁴³(2.12)
-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응한 실제적조치의 일환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이다.”¹⁴⁴(2.13)
- “힘이 없으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현세계에서 핵억제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주권 수호의 가장 튼튼한 보검이다.”¹⁴⁵(3.14)
- “지속적으로 가중되어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이러한 핵공갈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것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핵무력이다.”¹⁴⁶(4.18)
- 미국의 위협을 핵을 보유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장
 -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공화국에 대한 끊임 없는 핵공갈책동을 감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¹⁴⁷(3.14)
 - “미국의 항시적인 핵공갈과 전쟁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인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¹⁴⁸(3.25)

143- “제3차 핵실험 성공적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144-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해나갈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3일.

145- “핵독점시대는 끝장났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4일.

146-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8일.

147- “핵독점시대는 끝장났다.”

148- “자위적 핵보유의 진리성은 거세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5일.

- “우리의 선택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를 노리는 침략의 본거지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¹⁴⁹(3.25)
- “미국이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정책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¹⁵⁰(4.20)
- “미국과 괴뢰들은 10월 2일 제45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니 뭐니 하며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을 공식 결정하였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조선반도의 핵위협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으며 핵위협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¹⁵¹(10.2)
-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위협으로 간주
 -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겨냥한 가장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며 온갖 적대세력들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¹⁵²(3.5)
 - “미국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이다.”¹⁵³(3.7)
 - “미국·남조선 합동 핵전쟁연습은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연합전시지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

149- 위의 글.

150-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0일.

151- “北 「조평통」 대변인, 10.2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10.1) 비난 중통기자 문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일.

15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5일.

153-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수십년간 끊임없이 감행되었다.”¹⁵⁴(3.14)

- “미제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A’가 남조선 지역 상공에 날아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입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¹⁵⁵(3.29)

●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조차 핵전쟁의 일환으로 비난

-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과 괴뢰군부 당국자는 괴뢰군이 먼저 불집을 일으키면 그를 구실로 미국본토와 태평양방면의 미군이 총투입되어 전면핵전쟁을 감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 것을 꾸며냈다.”¹⁵⁶(3.26)

- “이것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과 괴뢰역적패당의 복침기도가 도를 넘어섰으며 위협공갈단계로부터 무모한 실전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¹⁵⁷(3.29)

- “각종 최신 미국 핵전쟁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이 더 빈번히, 무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어와 돌아치면서 핵불장난을 벌림으로써 이 지역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무기전시장, 활무대로 되어버렸다.”¹⁵⁸(10.24)

154. “핵독점시대는 끝장났다.”

155. “전략로케트軍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검토·최종비준,”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1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157. “전략로케트軍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검토·최종비준.”

158.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

(2) 선제공격을 자신들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

- 선제공격이 자신들의 군사작전 중의 하나임을 강조
 - “선제공격은 결코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의 혁명무력들은 적들에게서 사소한 도발기미라도 보이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퍼부을 만단의 작전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¹⁵⁹(2.14)
 - “북침핵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¹⁶⁰(3.30)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물리적 행동 감행 가능성 적시¹⁶¹(3.26)
 -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다.”
 -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동조하여 춤추는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 “첫 순간타격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씨도 없이 재가루로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159-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밟개버릴 것이다.”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1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16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정밀 핵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반미 전면대결전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철의 의지”
- 자신들의 핵무기 공격대상은 미국 및 남한의 군사기지임을 천명
 -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로켓군외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 하시고 최종 비준하시었다.”¹⁶²(3.29)
 - “상전의 핵우산을 믿고 멋없이 날뛰는 괴뢰들은 조·미사이에 싸 움이 터지게 되면 핵타격의 결불이 어떤 것인지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¹⁶³(3.26)
 - “우리 혁명무력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기지들이 녹아나고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하여 괴뢰통치기관들과 괴뢰 군기지들도 동시에 초토화”¹⁶⁴(3.30)

(3) 핵기술과 핵무력의 지속적 발전 추구

- 조선인민군 창건 81돌 중앙보고대회에서는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칭송하며 계속해서 핵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¹⁶⁵(4.24)

162. “전략로켓군외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검토 · 최종비준.”

1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1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165. “인민군 창건 8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4일.

- “김정은 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강화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가할 것”임을 강조
-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우리 식의 보다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며...”

(4) 정전협정 백지화

-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¹⁶⁶ (3.5)
 - “정전협정의 백지화는 당연하며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져야 한다.”¹⁶⁷(3.13)
 -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¹⁶⁸ (3.30)

¹⁶⁶-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¹⁶⁷-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13일.

¹⁶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5) 경제적 대가에 상응한 조치로 핵포기는 거부

- 경제적인 대가 그리고 대화와 교류는 핵포기와 상관없음을 주장
 - 핵보유를 두고 “그 무슨 경제적 혜택의 교환물로, 대화를 위한 흥정물로 논하는 것이야 말로 금전만능의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유치하기 그지 없다.”¹⁶⁹(3.25)
-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한 거부감 표명
 - “우리에게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핵무장해제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제압하자는 속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¹⁷⁰(4.20)

(6)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조건은 미군철수

- 국방위 정책국은 성명을 통해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명시¹⁷¹(4.18)
 - 첫째,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들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 셋째,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재투입시도를 단념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169. “자위적 핵보유의 진리성은 거세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5일.

170.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

171.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8일.

-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와 불가침조약이 허구라고 주장¹⁷²(10.12)
 -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시작한다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비핵화 시작이 분명해지면 평화적인 관계도 맺고 불가침조약도 체결할 것이라고 희뻘게 횡설수설하였다.”
 - “그 언제 그 어디에도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내리게 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달라붙은 나라는 있어본 적이 없다.”
 - “지난 세기 40년대 이전 소련에 대한 불의침공을 가리우기 위해 체결하였던 파쇼도이칠란드의 불가침조약이나 진주만에 대한 불의타격으로 미국을 허우적거리게 만들려고 벌린 군국주의 일본의 불가침외교의 기만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 “문제는 우리를 상대로 세상에 공개한 미국의 불가침타령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역사에 기록된 그 모든 기만적인 불가침보다 더 파렴치하고 간교하다는데 있다.”

- 결국 자신의 비핵화는 미군철수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강조
 -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핵전쟁책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철수하여야 한다.”¹⁷³(10.24)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2일.

173- “‘한반도신평프로세스’를 평함.”

(7) 자신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함을 강조

- 자신의 핵무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
 - “이번 핵시험은…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다.”¹⁷⁴(2.12)
 -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공갈을 일삼던 시대가 끝장났다는 것을 세계에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된다.”¹⁷⁵(3.14)
 - “역사에는 핵 대 비핵의 군사적 대결은 있었어도 핵 대 핵이 맞선례가 없다.”¹⁷⁶(5.16)
 - “미국이 내놓은 불가침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지만 핵을 가진 우리의 자위적혁명무력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담보해 주게 되어있다.”¹⁷⁷(10.12)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의미 분석

- 2014년 북한은 그 어느 해보다 강한 어조의 핵무기 고수 및 핵보유국의지를 표명함.
- 자신의 핵무장을 외부, 특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외부에 위협을 제거하는 공세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주장

174. “제3차 핵실험 성공적 진행.”

175. “핵독점시대는 끝장났다.”

176. “무모한 핵공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13년 5월 16일.

1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 핵무기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까닭이며,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내비치는 것은 공격 위협을 통해 미국과 남한의 행동반경을 좁히려는 의도로 분석
-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하고 핵공격 대상지역에 남한을 포함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추정
-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군사훈련으로 확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또한 자신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 대내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군사훈련으로 확대해석하여 군대의 사기진작과 경계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
 - 대외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시도
-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면, 현재까지 축적된 북한의 핵기술이 실전화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내부평가를 고려 관련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음.
-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의 일환이면서, 남한 내 평화협정체결 필요 주장에 힘을 실어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공세로 추정
 - 사실상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지난 60년간 43만여 건에 달하며, 주요협정 위반과 도발 건수는 250여 차례에 달함.

-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이
유 또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자신의 핵무장
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평화를 저해하는 국가
가 미국임을 강조하여 남한 내 반미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전략

(2) 특이사항

- 핵공격 위협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전략,
즉 어떠한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어느 지점에 어떠한 방
법으로 핵무기를 투발할 것인가와 같은 전략은 알 수 없음.
- 하지만 북한의 발언, 즉 자신의 핵무장이 자신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통해 기본적인 북한의 핵전략 논리를
추정할 수 있음.
 - 군사력의 열세는 물론 핵무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무장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핵무기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생각임.
 - 북한이 생각하는 핵무기의 균형은 이동식발사 추진체나 핵무기
의 지하은신을 통해 자신은 2차 보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믿음이며, 적어도 선제공격을 통해 남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적절한 대북 억지방향은 북한으로 하여
금 자신의 핵무력이 상대방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임.

- 핵무장이 자위권 행사를 위한 수단이며 한미군사훈련과 군사계획이 자신을 향한 핵전쟁위협이라고 고집하는 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은 한·미·일의 6자회담 개최희망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Ⅲ. 요약 및 정세 평가에서 고려 사항



1. 분야별 특징

가. 정치분야

- 2013년은 김정은 집권 2년차의 특색을 드러냄.
 - 집권 1년차와 대체로 지속성을 보이거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짐.
-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의 주요 내용
 - 만경대와 백두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정통성 강조
 - 선대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제정
 -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수립
-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제시
 -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사상 강조
 - 장기적 국가전략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제시
 - 강성대국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식령 속도 창조
- 장성택의 처형과 유일영도체계 확립
 - 종파 행위 척결을 통한 유일영도체계의 담보 마련
 - 조선인민군 내 유일영도체계 확립 및 공고화

나. 경제분야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제기
 -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설정
 -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방위력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더 큰 힘을 돌린다고 주장
- 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 등 여러 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
 - 3월에 전국 경공업 대회를 열고 경공업 육성을 특히 강조
 - 경공업 원료, 자재 문제 해결 및 설비 현대화 필요성 강조
-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완성’을 강조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확고히 고수,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 대외 무역,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발전 천명

다. 대남정책

- 4월 말까지는 거부적이고 대결적인 대남 논조 유지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및 그 지속 가능성 비난
 - 박근혜정부 주요 인사의 대북 인식과 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비난
 - 3차 핵실험 이후 핵무력과 핵전쟁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한미연

- 합군사 훈련 및 한미동맹 강화 비난
 - 인권, 탈북자, 납북자 관련 왜곡 및 비난
 - 개성공단 관련 책임 전가
- 5월 이후 대남 유화 공세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사이 문제 논의 요구
 -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과시
- 9월 초 이후 다방면에 걸쳐 대남 비방 및 선전전을 재개
 - 박근혜정부의 대북인식, 인권·탈북 문제, 한미군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비난
 - 한국 내정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비난

라. 핵정책

- 핵실험과 핵무장은 자주권 행사라 강조
 - 미국의 위협을 핵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장
 -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위협으로 간주
- 선제공격을 자신들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
 - 선제공격이 자신의 군사작전의 하나임을 강조
 - 조선인민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물리적 행동 감행 가능성 적시
 - 핵무기 공격대상은 미국 및 남한의 군사기지

- 핵기술과 핵무력의 지속적 발전 추구
 -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핵포기는 거부
 -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조건은 미군 철수
-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

2. 정세평가에서 고려 사항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개념에 담긴 함의를 관찰할 필요
 - 이 개념은 김정은의 권위가 아니라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 옹위할 것’을 일차적으로 주장
- 병진노선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에서 어느 쪽에 강조점이 두어지는지를 관찰할 필요
 - 외부의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제건설에 전념하겠다는 천명한 것을 의미’하며 경제건설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
 - 다른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제건설보다는 핵무력건설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구체적 정책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하여 북한 당국이 어느 편에 정책적으로 더 중점을 두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필요

- 5월 이후 병진노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는 데,
 - 그 배경이 무엇인지,
 - 이것이 다만 언급하지 않을 뿐 정책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상으로 실효적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
 - 2014년 신년사에서 국방공업의 과제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 우리식의 현대적 무장장비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제시한 것에 유의

- 경제정책 방향에서의 주안점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필요
 - 북한 당국은 2013년에 신년사 및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에서 대외무역을 포함 다양한 경제 분야를 함께 강조했고, 3월에는 경공업대회 개최, 11월에는 국가경제개발구를 설치
 - 그러나 2014년 신년사는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앞세우면서 다른 것의 상대적 비중을 저하했고, 대외무역이나 국가경제개발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대남분야에서 유화 및 공격 논조가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필요
 -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말했는데, 이후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조를 변화시키는지 관찰할 필요

참고문헌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조선신보』.
-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 『평양방송』.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희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반공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용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용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2014년 대북정책 추진전략	최진욱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www.kinu.or.kr

